

지역 중소건설사 병주고 약주고

지방계약법 개정안 13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건설공사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입찰업체 부담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시설공사를 제외하고 일반경정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시설 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는 제안서·설계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지자체 발주공사 일반입찰 전환-비용부담·독점문제 해소 기대 '철새기업' 지역업체 인정-수주 감소 불가피 향토기업 도산 우려

협상계약 방식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이 많이 지출돼 입찰업체에 부담이 가중됐다. 또 평가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특정업체 수주 독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었다. 앞으로 시설공사가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입찰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역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최근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가 입찰공고 중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사업자를 신설·등록해도 해당 지역업체로 인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지역제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 공사들량의

상당수를 외지·철새업체들이 수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입찰공고 중 외지·철새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업체들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향토기업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건설공제조합, 제110회 임시총회

“당기순이익 1200억 달성… 목표보다 140% 초과”

(8월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12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2016년 경영계획상 목표(880억원)를 140% 초과달성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0회 임시총회(사진)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당기순이익 증가는 영업수익 감소 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수료 및 용자금 이자율을 인하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억원 이상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영업비용 감소와 자금운용투자 수익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급증했다. 대손상각비, 대위변제준비금 등 영업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부실채권 회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조합



이 축적한 선제적 채권관리를 통해 보증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합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높았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합은 시장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평균 6%대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는 조합이 직접 상품구조개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유가증권 투자 전략에 힘입은 것이다.

또한 조합 신사업으로 금부상

한 공제사업 실적도 단체상해공제 등 신상품 출시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승준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으로 조합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조합원 부담은 줄고, 자금운용 등 영업 외 수익은 커졌다. 또 보증대금급 방지 등 채권관리 노력으로 영업비용이 크게 감소한 결과 2016년 경영계획 목표를 이룬 시기에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 사장은 “경영 성과를 더욱 더 확대해 조합원의 경영 안정에 도움

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축사에서 “조합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실한 경영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합의 성장 과실은 금융지원 확대 등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사 지원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별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담보용자제도를 개선했다. 또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 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설도급안심공제 상품을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종평제 낙찰률 고공행진 언제까지 이어질까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가 집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낙찰률이 9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박한 공사비로 인한 적정 실행확보 우려가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현상일 뿐, 지속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달청은 8일 종평제 방식으로 발주한 경남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추정가격 309억원 규모의 4등급 대상으로, 제천행복주택 건립공사와 함께 종평제로는 첫 발주된 물량이다.

개찰 결과를 보면, 앞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3개 건설사만 투찰에 나섰다.

예정가격 대비 최저 투찰률은 89.683% (호림종합건설), 최고 투찰률은 92.474%를 기록했다. 나머지 1개사도 92.057%의 투찰률을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92%대의 낙찰률이 접쳐지는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집행된 종평제 입찰의 낙찰률(예상)도 만만치 않다.

광주도시공사가 자체 집행해 낙찰자 선정까지 완료한 광주역행복주택 건립공사의 경우 무려 94%대 낙찰률이 나왔다.

앞으로 집행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이 수준의 낙찰률이 깨지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달청이 지난 7일 개찰한 제천시행복주택 건립공사와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의 예상 낙찰률은 각각 90%선과 86%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개찰이 완료된 4건의 평균 낙찰률(예상)은 90%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저가낙찰제 평균보다 무려 15%포인트가량 높고, 지금껏 집행이 완료된 중앙조달방식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공사 18건의 평균보다도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낙찰률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유독 공사비가 박한 입찰물량이 제도 시행 초기에 몰리면서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개찰한 공사마다 투찰률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역행복주택의 경우 애초 중앙조달방식으로 추진되다 자체 집행으로 전환된 물량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무비 등 조달청의 제비율도 적용할 수 없는 수준의 공사비가 제시된 것이다.

업체별로 적어도 5~10%포인트가량의 실행률이 상승한 것이다.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제천행복주택 역시 박한 공사비로 인해 실행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적정성 심사 및 입찰에 고작 3개, 4개사만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단가심사의 기준이 되는 균형가격이 업체들의 투찰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낙찰률 또한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도 마찬가지다.

애초 95% 이상의 낙찰률이 기대되는 탄기(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됐으나, 공사비 부족문제로 인해 반복적인 유찰 사태를 겪고 종평제로 전환된 물량이다.

오히려 86%대 낙찰률로는 손실을 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한 업계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단순 수치만 보고, 낙찰률이 너무 높다거나 종전 대비 예산낭비가 걱정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박한 공사비와 수익성 우려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일 뿐”이라며 “90%를 넘나드는 낙찰률은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종심제와 달리 77%라는 사실상의 하한선 때문에 최저 낙찰률은 종심제보다 높게 나타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종심제, 종평제 도입과 더불어 업계에서도 저가경쟁이나 저가투찰은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상 실행 및 수익성에 따라 낙찰률의 탄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